

# 최근 북한경제와 남북경협

# 1. 북한의 경제현황 및 정책변화

# 북한경제체제의 특징

- 사회주의적 소유제도
- 중앙집권적 계획경제
- 자립적 민족경제

# 1990년대 북한경제의 위기

-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 한계
  - ▶ 불균형 성장 및 외연적 성장

# 정치.경제적 위기의 심화

- 김일성 주석의 사망
  - 체제존립에 대한 위기감 확산
  - 유헌통치와 정치적 과도기
- 계속되는 마이너스 성장
  -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으로 인한 산업가동률 저하
- 최악의 식량난
  - 1990년대 중반 최악의 자연재해
  - 대규모 기아현상과 탈북 주민 확대
- 계획경제시스템의 붕괴
  - 배급제의 붕괴와 비공식경제부문의 확산
- 국제적 고립의 심화
  -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

# 김정일체제의 공식화와 강성대국

- 김정일체제의 공식화
  - 1997년 10월 당 총비서 취임
  - 1998년 9월 국방위원장 취임
- 김정일시대의 국가발전전략: 강성대국
  - 1998년 8월 22일자 노동신문 정론에서 최초 언급
  - 사상, 군사, 경제강국
  - 선군정치노선과 제2의 천리마대진군
  - 실리사회주의

# 경제정책의 변화

- 선행부문의 중시
  - 기술개건 및 현대화 작업 적극 추진
  - 전력, 석탄, 금속공업 및 철도운수
- 과학기술개발 적극 추진
  - 과학기술개발을 통한 '도약성장 전략'
  - 정보통신산업 및 생명공학 등의 첨단부문 중시
- 실리중시와 경제관리체계 개선
  - 내각의 역할, 독립채산제, 사회주의 분배원칙 강화
- 농업 및 경공업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
  - 농업생산량 확대: '대흥단정신'
  - 경공업 현대화, 전문화
- 대외경제협력의 확대
  - 서방선진권과의 경제관계 확대에 주력

## 7.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발표

- 북한은 2002년 7월1일에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를 발표
- 동 조치에 대해 시장경제로의 개혁과 기존 계획경제체제의 보완이라는 상반된 평가
- 이전 부분개혁조치에 비해서 상당히 진전된 변화이며, 관련 후속조치가 주목

# 7.1조치의 주요 내용 및 배경

## ■ 7.1조치의 주요 내용

- 가격 및 임금의 현실화
- 배급제의 부분 수정
- 국가계획의 분권화
- 기업부문의 경영자율성 확대
- 환율조정

## ■ 7.1조치의 배경

- 경제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
- 공식경제부문의 한계, 비공식부문의 확대
- 핵심계층 및 일반 주민의 생활안정

# 대외개방의 확대: 경제특구 설치

-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의 동시 추진
- 신의주특별행정구
  - 홍콩에 버금가는 독립성 부여
  - 입법, 행정, 사법의 자율성
  - 50년간 시장경제제도 보장(2052년까지)
  - 양빈사태 이후 사업 부진
- 개성공업지구
  - 남한기업 전용공단
  - 경의선 도로, 철도 연결시 물류체계 개선
  - 남북경협외 상징적 사업: 금년중 1만평 시범조성, 분양
- 금강산관광지구
  - 육로관광 실시후 사업 활성화
  - 원산일대를 포함하는 국제관광단지로 개발

# 추가적 개혁조치

- 북한에서 ‘경제개혁’ 공식 사용
  - 2003년 5월 조선중앙방송에서 언급
- 기존 농민시장을 ‘종합시장’으로 개편
  - 시장기능 중시
  - 비공식부문의 현실 인정, 공식부문으로 수용
- 인민생활공채 발행
  - 2003년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
  -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정 총당 및 인플레이션 압력 해소
- 경제관리체계의 개선
  - 기업소의 경영자율성: 원가개념, 이윤중시, 생산전문화
  - 농촌경리 개선: 분조관리체계의 강화, 가족농의 도입 모색
  - 사회주의분배원칙 강화: 번수입지표

# 2003년도 경제실적 및 평가

- 1999년을 기점으로 북한 경제 회복 추세 지속
- 2003년에도 소폭의 플러스 성장 실현
  - 북핵문제로 인한 대내외적 어려움
  - 산업전반의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 현상 지속
  - 7.1조치 이후 상업·유통부문 활성화
  - 양호한 기상조건으로 농업생산량 증가
  - 인민생활공채 판매수익금의 생산부문 투입
  - 대외교역의 증가: 대중교역 대폭 증가
  - 남북교역 확대

# 2004년도 북한경제정책 전망

- 신년사에서 핵심과업으로 정치사상, 반제군사, 경제과학의 3대전선 제시
- 2004년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정책방향 제시
  - 국방공업 강화: 핵문제로 인한 정세반영
  -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중시
  - 농업생산 확대 및 인민소비품 증산
  - 실리중시의 경제관리개선: '경제사령부'로서의 내각
  - 경제와 과학기술의 결합

## 2. 남북경협 현황 및 전망

# 남북교역 현황

- 2003년 남북교역액은 7억 2,422만 달러로 전년 대비(6억 4,173만 달러)대비 12.9% 증가
  - 연간 총액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7억 달러를 초과
  - 이중 반입액은 2억 8,925만 달러로 6.5% 증가
  - 주요 반입품목은 농림수산물과 석유류
  - 반출액은 4억 3,497만 달러로 17.5% 증가
  - 주요 반출품목은 화학공업제품, 석유류, 농림수산물
  - 상업적 매매거래 및 위탁가공 교역 등과 같은 거래성 교역은 4억 868만 달러(반입 2억 8,908만 달러, 반출 1억 1,960만 달러)로 전년대비 19.2% 증가

# 대북 경제협력 현황

- 한국기업의 대북투자 즉 대북 경제협력사업은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
  - 대북 경제협력사업은 1992년 이후 2003년 말까지 참여업체 수는 56개(경제협력사업자 승인 기준)이며, 이 중 사업승인 건수는 27건에 불과
  - 사업승인을 받은 27건중에서도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, 녹십자의 유로키나제 제조사업, 평화자동차의 자동차 수리 및 조립사업, 국양해운의 남북해운사업 등 6~7개만이 제대로 사업진행

# 2003년도 남북경협 평가

- 참여정부의 출범 첫해인 2003년의 남북경협은 북핵문제에도 불구하고 교역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, 투자 및 협력사업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함
- 지난해 남북경협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, 첫째, 경협관련 제도적 개선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
  - 남북한 당국은 '경협관련 4개 합의서'(투자보장, 이종과세방지, 상사분쟁해결, 청산결제)의 발효통지문을 2003년 8월에 교환함으로써 남북경협의 제도화 및 법적 안정성을 제고
  - 또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원산지규정, 해운협정, 3대 경협사업(금강산 관광사업, 개성공단 건설사업, 철도·도로 연결사업)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서도 몇가지 합의를 도출

## ■ 둘째, 거래성 교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교역의 지속적 확대

- 지난해 남북교역이 증가한 것은 상업적 거래와 섬유류 위탁가공교역 등의 거래성 교역이 꾸준히 증가한 것이 주원인
- 비거래성 교역 역시 경수로사업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대북 식량차관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과 철도·도로 연결사업에 관련된 자재장비 등의 활발한 지원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증가
- 그러나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 거래성 교역이 전년보다 3%포인트 늘어난 56.4%를 차지
- 이와 같이 거래성 교역을 중심으로 남북교역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북핵문제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가시화 되면서 남북경협에 대한 북측의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기 때문임

## ■ 셋째, 대북 경제협력사업이 여전히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

- ▶ 남북교역에 비해 투자와 협력사업은 여전히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, 그 원인은 1차적으로 북핵문제로 인한 정치·군사적 상황의 불확실성
- ▶ 그 외에도 4대 경협합의서의 세부규정에 대한 합의가 지연됨으로써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점
- ▶ 지난 한해 한국경제가 목표성장률의 절반수준에 머무는 등 경기침체가 계속된 것도 기업들의 대북 투자를 가로막은 원인으로 지적

# 최근 남북경제협력의 주요 현안

## ■ 첫째, 철도·도로 연결사업

- ▶ 경의선 및 동해선이 연결되면 남북한간 인적·물적 교류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며, 그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
- ▶ 철도·도로 연결은 남한기업의 대북투자 활성화 및 남북한간의 경제적 연계성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
- ▶ 남북한간의 철도·도로 연결은 분단상황으로 인해 일본과 같은 섬나라였던 남한이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고, 동북아에서 물류·교통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한층 강화하게 되는 계기

## ■ 둘째, 개성경제특구 사업

- ▶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와 현대는 2000년 8월 22일 북경에서 '개성경제지구 및 관광 사업 합의서'를 발표
- ▶ 북한은 2002년 11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「개성공업지구」를 새로 지정하고, 11월 20일 「개성공업지구법」을 채택. 발표
- ▶ 금년중에 1만평 공단조성, 시범운영에 합의
- ▶ 경의선 철도.도로가 개통되어 남북이 연결될 경우 개성지역은 남한과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개성시를 배후 도시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
- ▶ 전력.용수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

## ■ 셋째, 금강산 관광사업

- ▶ 금강산관광사업은 남북경협 의 일환으로 남북관계의 진전과 관련하여 큰 계기를 만들었으며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의 추진에 있어 상징적인 의미도 포함
- ▶ 그러나 최근 관광객 감소 및 수익성 악화, 현대아산의 자금난 등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
- ▶ 북측은 2002년 10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「금강산관광지구」를 지정하고, 11월 13일 정령으로 「금강산관광지구법」을 채택. 발표
- ▶ 남북한 관광교류는 ▲남북한의 상호이익 ▲민족경제 공동체 형성 촉진 ▲한반도의 균형적 발전 ▲남북한 긴장완화 등에 기여
- ▶ 최근 육로관광으로 관광사업이 점차 활성화

# 남북경협외 추진방향

- 대북정책의 최종목표는 통일의 실현이며, 이를 위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임
  - 따라서 남북한 경제협력의 기본목표는 교류·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양측의 경제적 상호의존도 심화와 경제통합의 기반 마련
- 현 단계에서 남북경협은 북한이 처한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일방적·시혜적 성격을 띠 수밖에 없지만,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실익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
  - 따라서 남북경협의 추진방향은 첫째, 북한경제의 회생 지원
  - 둘째, 북한의 개혁·개방정책의 유도 및 지원
  - 셋째, 경제발전전략의 공동 모색 및 작성
  - 남북한 경제의 상호의존성 증대를 통한 경제통합의 기반 조성